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방향

최 병 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

지난해는 참으로 다시다난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 북한 용천참사, 이라크파병, 국보법 폐지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는 거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은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선정한 지난해의 10대 뉴스에 꼽혔다.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사회적 충격도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다.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데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갖고 있다. 우리 국토는 수도권권의 과도한 집중에 반해 지방의 공동화라는 극심한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추락하는 대외 경쟁력을 되살리고, 통합된 사회, 선진화된 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한 한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왔고, 때문에 정부도 그 동안 수많은 균형발전시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도는 매번 과녁을 빗나갔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지 못했던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균형발전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다른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데 이 정책의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도가 특별법 위헌 판결로 좌초됨으로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다시금 실패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특별법 위헌 판결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를 철석같이 믿고 떠났던 충청권, 특히 연기·공주지역 주민이 심각한 수준의 물적·심적 타격을 입었다. 일반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였던 균형발전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결된 한 묶음의 정책으로 추진되던 공공기

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정책 등이 행정수도의 좌절과 함께 추락할 위기에 처한 까닭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했다. 그리고 출범과 동시에 일부의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수행의 4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첫째로 후속대책 수립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넷째, 후속대책은 가급적 조속히 수립하되 줄속에 흐르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후속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집약적으로 거쳤고, 그 결과 10여개의 후속대안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들 10여개 대안을 위원회가 정한 대안선택 5대 원칙에 따라 3개의 유력대안으로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한다. 둘째,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며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하여 자족성 있는 도시로 건설한다. 넷째,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후속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마침 국회에서도 여·야의 합의 아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헌법기관인 만큼 국회에서의 합의는 곧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 특위가 국민의 뜻을 모아 후속대안에 대한 심층 논의와 최적대안의 선택을 선도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후속대책위원회는 국회특위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국회의 특위나 정부의 후속대책위원회가 공히 잡고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시기는 대략 2월 말이다. 그전에 압축대안에 대한 정교한 비교 분석이 끝나고 전문가 및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적대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특별법의 2월말 제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 위헌 결정은 오히려 충청권의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하게 굳힌 계기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균형발전의 기회를 과거에 흔히 보아왔던 것처럼 놓치는 일이 다시금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